

답 변 서

☐ 건 명 경북행심 2020-7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고송구(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 피청구인 영주시장

☐ 재 결 청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청구일 2020. 02. 24.

☐ 청구서 수령일 2020. 02. 25.

☐ 행정심판 청구대상 처분의 내용

○ 처분내용 : 영주시 떡볶이 사건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결과에 대한 비공개 통보

○ 처 분 일 : 2020. 2. 24.(총무과-5452)

○ 처분사유

청구인의 ‘영주시 떡볶이 사건 징계처분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6447876, 2020.02.12.)에 대하여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내용이라도 해당 공무원의 인격, 명예, 사회적 평가 등 개인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 불복 및 이의신청 절차 고지 유무 및 내용 : 유 【총무과-5452(2020.02.24.)】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시 고지함

위 당사자 사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 변 취 지

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답 변 이 유

1. 사건(정보 비공개 결정 통보)의 개요

청구인의 ‘영주시 떡볶이 사건 징계처분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6447876, 2020.02.12.) 요청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는 당해 공무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내용이라도 해당 공무원의 인격, 명예, 사회적 평가 등 개인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2020.02.24.) 하였습니다.

2. 정보 비공개 결정의 법적 근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나.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매뉴얼)」(행정안전부, 2019)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함은 이유가 없습니다.(을 제1호 증 참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개인정보라함은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아울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매뉴얼)」에는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표사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징계처분내역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을 제 2호 중 참조)

따라서, 징계처분 결과는 비록 공무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내용이라도 해당 공무원의 인격, 명예, 사회적 평가 등 개인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정보이며, 정보공개로 인하여 징계처분 대상자가 받게 될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영주시 떡볶이 사건 징계처분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 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1. 을 제1호 증 :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을 제2호 증 :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매뉴얼) 발췌 1부.
3. 을 제3호 증 :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1부.

2020. 03. 04.

영 주 시 장 (인)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13.>

영 주 시

수신자 고승구 귀하 (우 54044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6447876

접수일 2020. 02. 12.

청구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9월 23일, 영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이 야근 근무 중, 떡볶이를 배달시킨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상점의 상호를 적시하며 갑질을 자행한 사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3. 당해 사건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고, 공분한 국민이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동시다발적으로 방문하여, 영주시청 홈페이지가 접속불가한 상태가 될 정도로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현저히 악화시킨 사건입니다. 결국, 영주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의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바, 3번 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고,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게 한 사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징계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공개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합니다.
5. 이에 상기 본인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조에 의거, 영주시청 소속 공무원 5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분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납부 금액	0원	0원	0원	0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전부 또는 일 부) 내용 및 사유	<p>안녕하십니까?</p> <p>선생님께서 청구하신 떡볶이 사건 관련 징계처분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p> <p>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내용이라도 해당 공무원의 인격, 명예, 사회적 평가 등 개인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기타 궁금한 사항 및 문의는 영주시 총무과(054-639-6272)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경상북도영주시장

주무관	김상현	인사팀장	정병곤	총무과장	김만기
협조자					

시행 총무과-5452(2020. 02. 24.)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휴천동)

전화번호 054-639-6265

팩스번호 02--

/ kimsanghyun@korea.kr

/ 공개 구분



(뒤 쪽)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적인 날인에 관하여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
제
1
호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www.open.go.kr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

음
계
고
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¹⁵²⁾ 또는 자유¹⁵³⁾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대법원 2014.7.24., 2012다49933)¹⁵⁴⁾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판단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152) 사생활의 비밀 :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함

153) 사생활의 자유 :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함

154)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음

● 비공개 유형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 당해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086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A.**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이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A.**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087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A.**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 대상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①근무성적·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과 같이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제4장
정보공개/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음 제 2 호

- A.** 따라서 “교장·교감의 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과목”의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 인사와 교직원 현황에 성명, 직위, 사진 등이 이미 공개된 학교가 대부분인 점, 전공과목은 개인의 학력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A.**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해당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090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 A.**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가 가능하나, 판·검사는 ‘법관징계법’ 제26조 및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징계처분 내역을 판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091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정보공개청구

- A.**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회원 개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개인식별형’ 정보인 이름과 ‘프라이버시 침해형’ 정보인 주소 및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회원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A.** 검토여하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제4장
정보공개/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문
제
2
호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019 개정판)

발행일	2019. 5.	
집필·편집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행정주사 전산주사	정보공개정책과 장 동수 양명석 고준석 박정란 손중우 박성현
발행처	행정안전부 044·205·2265, 2267, 2268	
기획·인쇄	한별기획 044·863·2205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6447876	접수일 2020. 02. 12.	처리기간 10일(2020. 02. 25.)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고승구 주소(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911001-*****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kosg5120@nate.com
청구 내용	<p>[영주시 떡볶이 사건 징계처분결과 공개 요청합니다.]</p> <p>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2019년 9월 23일, 영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이 야근 근무 중, 떡볶이를 배달시킨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상점의 상호를 적시하며 갑질을 자행한 사건에 대해 문의합니다.</p> <p>3. 당해 사건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고, 공분한 국민이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동시다발적으로 방문하여, 영주시청 홈페이지가 접속불가한 상태가 될 정도로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현저히 악화시킨 사건입니다. 결국, 영주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p> <p>4. 그러나,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의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바, 3번 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고,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게 한 사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징계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공익적 목적에 부합합니다.</p> <p>5. 이에 상기 본인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조에 의거, 영주시청 소속 공무원 5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분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p>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전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해당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20 년 02 월 12 일

청구인

고승구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영주시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6447876	청구인 성명 고승구
접수부서 총무과	접수자 성명 이예경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2020 년 02 월 12 일

경상북도영주시장



인
제
3
서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